

전남도, WTO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도, 농정혁신위원회서 쌀 예외품목 지정 등 15건 논의
최종안 검토 후 국회·농림부·행안부에 대책마련 촉구

전남도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건의 내용은 모두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 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 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이다.

또 ▲정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업의 '무역조정 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

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인 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출범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구 감소지역 국가지원 균형발전 이뤄야” 지역균형발전협, 국회서 정책방향 토론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 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지사와 박명재(자유한국당·경북 포항)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했다.

송재호 위원장의 '비수도권 지원 방안'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분권 방안과 인구 소멸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교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토론회에 앞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라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해 토론회가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2019 광주미래식품전' 개막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광주미래식품전' 개막식에서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먹밥 경연에 출품된 요리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시내면세점 무산

광주시 시내면세점 유치 계획이 무산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인천·광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청을 접수받았지만 광주는 지원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세관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로부터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받은 뒤 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유통 3사 대기업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손사래를 쳤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한 곳이 수익성 검토를 하며 관심을 보였으나 적자가 예상돼 포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유치가 필요하지만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내년에 다시 시내면세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민간공원사업 시의회서 집중 추궁...차질 우려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환(민주·광산5) 의원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어떤 근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심사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 중 자문인지, 의결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르

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성격이다"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문제가 있어) 특정감사의 적절성이 인정됐으며, 최종 행정의 책임은 광주시가 진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은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

상대상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할 수도 있느냐"고 질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례사업 공원 9곳 중 최종 협약이 체결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최종 협약 후 내년 4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공원지정이 해체돼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도 "애초 사업 제안서 자체는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뒀는데, 지위 반납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3일 만에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 감사를 했다. 변경 결과 통보 이전에 평가표 유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도시공사는 순위가 바뀔 게 아니고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돼 자진 지위를 반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협약 체결 전 사업을 포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시가 사업을 인수해 재정 공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내년 4월까지의 주요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고 사실상 공원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법정서 진실 밝힐 것”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

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5시35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당회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로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목포시 외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단충주택 근매 광주역 부근 중충동 땅 139㎡ 1억5백
- 영광군 연산면 신상리 땅 2648㎡ 주택 출몰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북구 두암동 버스도로전 2층 주거지 950㎡ 건물 신축 출몰 19억
- 남구 월산동 땅 127㎡ 2층 주택 118㎡ 1층 임대 7천 2층 주인거주 1억6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전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2층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2억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연산동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문당면 연산강점 48900㎡ 펜션 147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 3억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유소경쟁용 8억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 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통 신축카페매수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면적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음 5억2천
- 월산동 상점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나주시 내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문제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월)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월)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 형 일 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